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더 많은 학생들이 진상규명 운동에 동참하자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진상 규명을 기를 쓰고 방해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거리로 터져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을 외치며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년 동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철도 파업 탄압, 세월호 참사,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왔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자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터져 나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당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던 5백여 명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도를 넘었다. 구조에는 무능했던 경찰은 진압과 탄압에는 신속했다.

경찰은 범국민대회 도중에 광화문에서 농성하던 유가족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16일 집회에서도 경찰 폭력으로 한 유가족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날 경찰은 연행 당하는 유가족을 만나러 광화문으로 달려간 참가자들을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백70여 대를 동원해 6겹의 ‘근혜산성’ 차벽으로 막아 세웠다. 172개 부대, 경찰 1만 3천7백여 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고 물대포를 사람에게 조준해서 사격했다. 그래도 사람들의 분노가 식지 않자 당황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 행동은 경찰 폭력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는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경찰은 집회 다음날인 4월 19일에 “불법 폭력 행위 ...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304명의



4월 18일 경찰이 '유민 아빠' 김영오 씨를 경찰 버스에서 떨어뜨려 연행하고 있다.

생명을 진도 앞바다에 침몰 시키고 이윤 경쟁 체제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진짜 폭력이다. 이 체제의 수혜자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1년을 보낸 것이 바로 폭력이다. 참사의 주범인 국가가 도리어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조작·왜곡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야말로 폭력이다.

부패 스캔들

경찰이 이렇게 보복성 탄압으로 나오는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부 시행령(안) 기습 입법 예고는 무리수였다. 과반수 여론이 유가족들의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요구를 지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져,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등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 나왔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정권 핵심부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이완구는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안고 5번째 '사퇴 총리'가 됐다.

정부와 경찰이 정당한 항의를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고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집회 참가자 개인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보여 준 것은 구조에는 무능, 진실에는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뿐이었다. 이토록 자격 없는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4월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만나거나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으로서의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사소한 일들을 벌미 삼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위축시키고, 대중에게서 유가족을 고립시키려 한다.

해경 지도부가 구조 당시 교신 기록을 조작한 것도 묵인한 정부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한 사람들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 연행자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구속·탄압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호소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25일 세월호 집회 등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 경찰 당국의 협박과 탄압 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것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세월호 범국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4월 25일 (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참가 문의 : 010-5678-8630

진상 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정부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사 권한을 정부(경찰,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한정하고, 핵심 직책에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전 해경)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주범은 노동 착취 강화 주범

박근혜 정부에 맞선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지지하자

18일 집회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세월호 진실 규명에도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며 발언해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한상균 위원장은 참가자들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와 박근혜 퇴진을 내건 4월 24일 총파업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유가족들도 여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같은 조직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만나고 서로 고무하는 것은 박근혜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을 억눌러오면서 노동자 착취 또한 강화해 왔다. 박근혜는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

의 고통을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더 많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은 진실 규명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
▶ 뒷면으로 이어짐

박근혜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모두를 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장기불황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고, 자본가 계급을 살리고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퇴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을 내걸고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포하자 정부는 '불법 파업'을 운운하며 엄정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경제 위기 시대에 파업이 웬말이냐며 비난을 한다. 지금 같이 어려운 때 정규직 '귀족'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투쟁을 하는게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문제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개혁의 진정한 내용은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늘리고 노후자금을 강탈해서 자본의 비용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자본들의 수익성 하락을 만회해주려 노동의 몫을 줄이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현행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때만 가능하다.(물론 2009년 쌍용차 사례를 보면 자본가들은 이조차도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365일 상시적인 개별해고가 가능하게 하려 한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고용을 불안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한다.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직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인턴 인생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은 기업들이 마음 편히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더 어려워 진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내용 중 어느 것도 청년들을 위한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이 취직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청년들에게 비정규직과 인턴 인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취직이 된다 한들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추진한다는 공무원 연금 개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발판 삼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전반을 삭감하

려 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노후를 청년 개개인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에선 공적연금이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 정책들은 청년들에게도 이득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박근혜에 맞선 더 강력한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디딤돌이 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게 청년들에게 더 이롭다.

▶ 앞면에서 이어짐

저인 '이윤 경쟁 체제'의 본질이 드러날까 봐 걱정해왔다. 세월호 참사가 낳은 광범한 분노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차질을 줄까 봐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세월호 같은 일들에 노출돼 있다.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만 37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

만 7천 5백 명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이 대부분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 이란 사실도 이 체제에서는 안전조치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이런 끔찍한 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이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연일 언론들이 하루 손실액 몇 천 억 원이라고 호들갑을 떠난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노동자들

이 자기 월급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생산해왔는지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힘은 이윤에 눈이 멀어 진실을 덮으려는 기업과 국가도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오는 4월 24일 총파업이 이후 투쟁의 도약대가 돼 노동자 운동이 전진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학생들은 노동계급의 투쟁도 전진하기를 바라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문의: 010-5678-8630)

4월 24일(금)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멈춰! 박근혜, 가자! 4.24 총파업!
오후 3시 서울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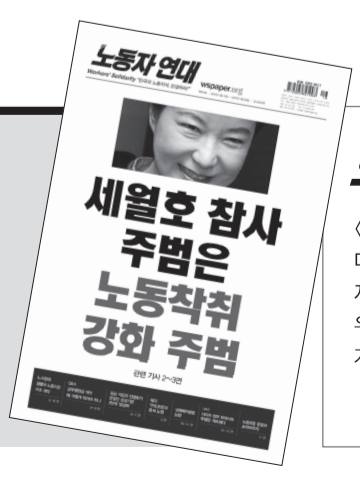
5월 1일(금)
멈춰! 박근혜, 가자! 서울로
2015 세계 노동절 대회
오후 3시 서울광장

대학생도 함께 읽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주요기사 세월호 참사 1주기, 시리아 집권 후 노동자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성매매처벌법 논란 등

대표전화 02-777-2792,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에 초대합니다!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은 〈노동자 연대〉의 기사를 읽고 현안 쟁점과 마르크스주의 사상들을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독자 모임 참가자들이 원한다면 쉬운 서적들을 함께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가? 동아시아 불안정과 제국주의,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여성해방과 계급투쟁 등의 주제로 토론하는 12주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자 연대〉의 기자들이 교육자로 주로 참가합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참가 신청 및 문의 010-5678-8630